

# 한빛원전 기준초과 온배수 배출... 14년째 저감대책은 '감감'

## 수온 1도 상승 범위, 환경영향평가의 3배 달해 어중 급감·환경청 측구에도 원전 당국은 뒷짐만

한빛(영광)원전이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청)의 온배수 배출 기준 준수 요구를 14년째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배수 배출로 원전 앞바다 수온이 현저하게 올라 어종과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환경청의 거듭된 지적에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원전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27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 주변 해양환경 1차 조사결과(2001~2005년) 온배수 배출로 해수 온도

가 최소 1도 이상 상승한 범위(이하 수온 1도 상승 범위)는 배출구를 기준으로, 북쪽 17.0km, 남쪽 20.2km로 나타났다.

이는 한빛원전 5·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지 예측한 확산 범위(북쪽 4.5km·남쪽 6.0km)를 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예초 예상됐던 범위를 넘어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원전 냉각수 순환시 발생하는 온배수 배출은 환경오염에 해당(대법원 판결)하며 원전 앞바다를 오염시키고 어류 개체수와 어종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2차 조사(2007~2010년)에서도 온배수 배출로 인한 수온 1도 상승 범위는 북쪽 14.5km, 남쪽 14.5km로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한 확산 범위를 넘어섰다.

지난해 원전측 자체조사에서도 온배수 배출로 인한 수온 1도 상승 범위는 남서쪽 7.5km, 북쪽 4.0km로 나타나면서 온배수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온배수 배출 영향으로 수온 1도 상승 범위를 중요 지표로 삼은 이유는 ▲해수 온도 1도 상승은 육지 기온이 10도 이상 상승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변화로서 ▲지난 1965년부터 2007년까지 43년간 여수 연안 연평균 수온 상승 폭이 1.3도인데도 엄청난 해양 생태계 변화가 왔고 ▲100km당 수온 변화가 1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온배수 배출에 따른 해양환경 파괴 영향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게 국립수산과학원의 설

명이다.

문제는 한수원 측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환경청의 명령과 영풍지역 어민들의 민원에도 제대로 된 온배수 저감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환경청은 한빛원전 5·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근본적 온배수 저감 대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해양 생태계 파괴와 그에 따른 어민 등의 민원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복수기(열교환기) 설계 변경을 통한 온배수의 절대열량, 사용유량을 감소하는 방안과 온배수를 지역난방에 이용하는 방안 등을 시행해 환경 오염을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빛 5·6호기 건설을 추진하던 옛 과학기술처도 환경부의 지지를 수용했지

만, 막상 한빛 5·6호기가 가동에 들어간 이후에는 사전에 협의 된 온배수 배출 영향 범위를 준수하는 데 소극적이면서도 초당 300~330t의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한빛원전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류제와 돌제는 온배수 배출에 따른 환경 파괴를 막기에 는 역부족"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설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수차례 명령했지만 원전 측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류제는 어장 밀집지역 밖으로 온배수가 빠져나가지도록 하는 시설물(길이 1136m)이고, 돌제는 방류제에 따른 침식이나 퇴적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중요범죄 신고보상금 5000만원→5억으로 경찰, 10배 증액 추진

경찰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유령인 전 세모그림 회장을 수배할 때 이 훈령을 근거로 유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원으로 정했다가 '사안에 비해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일자 경찰청장 직권으로 5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경찰은 이를 계기로 보상금 상향을 검토해 왔다.

그동안 3명 이상 살해한 범죄자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최대 5천만원이었다.

경찰은 이 항목을 '3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의 범죄자를 신고했을 때'로 수정하고 보상금액 상한을 5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5억원은 기존 훈령에 기재된 신고 보상금의 최고 금액으로,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범죄 수사 방해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신고자에 게 지급되는 보상금 상한액이었다.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되던 2인 이상 살해 등 범죄 신고 보상금은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보상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연합뉴스

## 노점상 물품 훔친 이웃 노점상

노점상 가판대에 있던 물품을 몰래 훔치려던 또 다른 노점상 상인이 범행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행.

노점상 상인이 범행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행. ○노점상 가판대에 있던 물품을 몰래 훔치려던 또 다른 노점상 상인이 범행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행.

○노점상 상인이 범행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행. ○노점상 상인이 범행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행.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위험한 도로 결국... 27일 광주시 동구 남내동 광주-화순간 국도 29호선 도로에서 김모(50)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었다. 사고지점은 화순 방향과 남내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등 양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를 구분해주는 표지판과 분리대가 설치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나명주기자 mjna@

## 한빛원전 인근 주민 13명 등 갑상샘암 환자 223명, 한수원 상대 손해소

영광 한빛원전 등 전국의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가운데 갑상샘암에 걸린 223명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최근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모(여·48)씨의 갑상샘암 발병에 한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1차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 모집은 이달 30일까지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과 환경운동연합 등 8개 환경단체가

지난달 23일부터 한빛·월성·고리·한울원전의 방사능 비상계획구역(반경 8~10km) 안에 3년 이상 거주한 갑상샘암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 원고를 모집한 결과 223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현재 영광 한빛원전 인근 주민은 13명이 신청을 한 상태며, 고리원전 인근 주민 180명, 경북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20명, 경북 울진 한울원전 인근 주민 10명 등이다.

환경단체들은 오는 30일 손해소 1차 원고 모집을 마무리 짓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2월 10일께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인당 1500만원으로 정했다. 이 배상액은 1심 법원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할 돈이다. 갑상샘암 환자들은 또 변호사에게 200만원,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청구할 예정이다.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 신청 및 문의는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061-353-4994.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 한빛타워 ----- 분양/임대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축회사 자금관리를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기원) • 시공사 | 건해중합건설(주) • 신축사 | 아시아신축(주)

##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 유층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무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립인프라 • 신축사 | 아시아신축(주)

##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료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주)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